

2026년 5월 16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헌 법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16: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경우 그 물자 및 업체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④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나)에게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휴업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은/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라)은/는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대비 훈련기간이 1일인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공유(公有)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소유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정부가 물자의 소유자에게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물자의 소유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하지만,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과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는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 중에 있어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의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발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ㄴ.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외여행 중인 경우, 인력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 ㄷ.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년 이하의 징역이나 (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설보강의 준비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물자의 소유자에게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라)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1	500	500	500
②	3	1,000	1,000	500
③	1	1,000	500	1,000
④	1	1,000	500	500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기본 계획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민방위사태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등이 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두어야 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조사관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 계획의 종류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ㄷ.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ㄹ.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 및 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②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또는 물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보고 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그 금액이 동일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훼손한 경우<br>나.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인 경우<br>다. 직장 민방위 대장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인 경우<br>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르

④ 다, 르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②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에서 정한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 중 “공공기관 및 업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ㄴ.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 ㄹ. 특별자치도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ㄴ.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재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ㄷ.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0%를 지급한다.
- ㄹ.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령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그 절차와 신상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 공익법무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은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 ㄷ.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ㄹ.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경우에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 ㄱ(O), | ㄴ(O), | ㄷ(X), | ㄹ(O) |
| ② | ㄱ(O), | ㄴ(X), | ㄷ(O), | ㄹ(X) |
| ③ | ㄱ(X), | ㄴ(X), | ㄷ(O), | ㄹ(O) |
| ④ | ㄱ(X), | ㄴ(X), | ㄷ(X), | ㄹ(X) |

문 20.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의 운영 실태 확인·점검과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평가를 위해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해당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 예비군부대가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직장을 단위로 80명의 그 소속 예비군자원을 1년 이상 소대로 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 운영한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직장을 단위로 10명의 그 소속 예비군자원을 1년 이상 분대로 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 운영한 직장의 장은 그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을 정한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문 23. 예비군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원된 예비군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 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③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대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학교의 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지역예비군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 운영비를 지급한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폭도와 교전 중에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동원된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④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ㄴ.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ㄷ. 직장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ㄹ.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에는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활용하는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ㄴ. 재난피해 보상 기능
- ㄷ.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ㄹ. 에너지 공급 시설 피해 방지 기능
- ㅁ. 사회질서 유지 기능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나)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까지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국무총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매년 3월 31일	20일
②	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15일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매년 3월 31일	15일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20일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능력 보장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권역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정기교육으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에는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긴급구호에는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소방청장·경찰청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 ㄴ. 교통수송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물류체계를 제외)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ㄷ. 보건의료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료(응급의료를 포함)·약사(藥事)·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ㄹ. 원자력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O	O	X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O	O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순간 최대 인원이 1천명 이상으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공원·광장
- ㄴ.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ㄷ.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ㄹ.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ㅁ.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ㄷ.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9층 이하의 공동주택
- 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ㅁ.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ㄴ.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 ㄷ.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는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ㄴ.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ㄷ.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 ㄹ.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법령 I - 헌법**

문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甲)은 A군(郡)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이고, 을(乙)은 B군(郡)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이다. A군과 B군은 C도(道)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로 인접한 지역이다. C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도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수는 49,765명이고, A군의 인구 수는 21,756명, B군의 인구 수는 25,123명으로 A군과 B군은 각각 독립된 선거구이다. A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한 선거구구역표(이하 '선거구구역표'라 함)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은 각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선거구구역표는 인구 변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구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규율한 것으로, 乙은 甲에 비하여 선거권의 표가치가 적게 인정되는 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②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甲은 乙에 비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상승되어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선거구구역표에 따라서 A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한 것은,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편차  $\pm 60\%$ 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甲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선거구구역표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C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거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ㄷ.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혈통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복수국적의 선천적 취득과 이로 인한 국적이탈의 문제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다.
- ㄹ.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에 거주지, 근무지 등 생활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곳에 주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가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여자경찰관으로부터 뒤로 돌아서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거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는 방법으로 수행된 정밀신체수색은 체포된 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 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 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마약류사범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 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 인정의 범위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달리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중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부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다.
- ②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해당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의 적용에 있어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서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은 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 까지 미신고 집회로서 처벌할 수 없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문 6. 체계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보다 징역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만일 구체적 사안에서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시정하면 되므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 ④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문 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급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이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③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④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문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해당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의 해당 부분이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조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다룰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문 9.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  
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조항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ㄷ.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  
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ㄹ.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근친상간 금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 8촌 이내 혈족을 모두 금혼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ㅁ.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 금지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u>ㄱ</u>	<u>ㄴ</u>	<u>ㄷ</u>	<u>ㄹ</u>	<u>ㅁ</u>
①	O	O	O	X	X
②	O	X	O	X	O
③	X	O	O	X	O
④	X	X	X	O	X

문 1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관사는 영장을 발부한 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1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가기관 및 일반 국민을 구속하여,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경제협력을 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총액으로 당해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도 당해 회계연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12. 「계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 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거주·이전·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ㄷ.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ㄹ. 비상계엄 시행 중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 기준의 구별도 찾아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다.
- ②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는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포함된다.
- ③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의 공무원 중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열거적 규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장을 제외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문 1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에 따른다.
- ③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 ④ 2013년 1월 1일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5.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의 직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결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③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사유를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④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